

# 문 대통령 '경제 투톱' 동시 교체

신임 경제부총리에 홍남기·靑 정책실장에 김수현...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사회수석에 김연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하는 부분 인사를 단행했다.



홍남기 김수현 노형욱 김연명

### ▶ 새로운 '경제 투톱'의 인선 배경

홍남기, 정통 경제관료출신...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높아 김수현, 현 정부 국정과제 설계하는데 주도적 역할 담당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홍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국정 과제 조율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수석은 "홍 후보자는 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인데다 기획력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넓고 폭넓은 행정경험을 통해 경제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기획능력과 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또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을 최고의 책임자"라고 밝혔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 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총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 전문가로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 실현, 경제 사회적 격차 해소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나갈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승진 발탁됐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윤 수석은 "노 국무조정실장은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경영과 소통을 중요시 하는 업무방식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2년 3개월동안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역임하며 사회 경제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행정부는 물론 국회, 민간과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며 다양한 국가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도 인선 배경에 깔려있다.

차관급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전임인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하면서 그 자리에 발탁됐다.

김 교수는 학사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에서 복지팀장을 맡았으며 현 정부 출범 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군 등에 거명됐다.

윤 수석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큰 기여를 했다.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라며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길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공정경제 당연한 질서로 인식... 관행 정착시켜야"

### 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 상실 결과물은 대기업에 집중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 국회 계류... 통과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과 기업이 주역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 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땀 흘려 일해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

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서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과 기업이 주역이 돼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 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

## 文 경제 사령탑 교체, 이유는? 국정운영 동력 회복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떨어진 국정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승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로서 정부 출범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김동연-장하성 체제'의 경제팀 1기는 막을 내리게 됐다. 1년6

###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기존 경제정책 유지 의지

개월 만에 새롭게 '홍남기-김수현 투톱'으로 하는 경제팀 2기가 출범하며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사람을 오래 두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정부의 '경제 투톱' 교체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은 연말께로 예상됐지만 한 달 정도 앞당겨 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 투톱'간 마찰이 한창이던 지난 8월 '결과에 직(職)을 걸러'며 병합에 나선 뒤 내

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연말 정도에 동시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유기적인 호흡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김 부총리가 소신 발언을 멈추지 않으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운 것이 교체 결심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조기 교체를 결심한 배경에는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제 사령탑만으로는 위기 극복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악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모

든 정책 이슈를 삼키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시작된 경제 투톱의 교체설이 고착화되며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에서 영(승)이 안산다는 점도 교체 이유로 작용했다.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 전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것은 새로운 경제팀 출범이 그만큼 시급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기 교체를 통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정책실장으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승진 임명한 것을 볼 때 소득주도·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